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9. 23.(금) 10:00

시정질문 답변자료

구 미 시

시 정 질 문 요 지

질문 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자	비고
이지연	1. 구미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이행 계획과 활성화 계획은?	시 장 (행정안전국장)	P.11
	2. 타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선정활동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실행할 계획이 있다면 알려달라.		P.15
	3. 홍준표 대구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자신의 <맑은 물 하이웨이> 공약을 밝힌바 있다. 5공단 입주업종확대와 KTX구미역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 협력 등 구미현안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당선 후 구미시장의 활동이 있었는지, 구미 현안에 대해 대구시장과 어떻게 협의할 계획인지 알려달라	시 장 (상하수도사업소장)	P.17
	4. 최근 반도체 기판 관련 글로벌 기업인 LG이노텍과 1조4천억의 MOU를 체결한 소식을 접했다. 구미 반도체클러스터 특구 지정을 위한 활동을 응원한다. 다만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양성에 대해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육성을 교육의 협소화라고 우려하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7월 직업계고에서 반도체전산업의 중간전문인력 5,000명 양성계획을 발표했다. 경북도 교육감과 관련 계획을 협의할 계획이 있는가?	시 장 (경제지원국장)	P.19

질문	1. 구미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이행계획과 활성화 계획은?

□ 평소 지역 및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지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 헌법과
1949년『지방자치법』제정을 시작으로
1988년『지방자치법』전부개정,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고

○ 주민 참여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8년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의 문화·여가·복지·편익 기능의 공간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되었습니다.

○ 이후 2013년에 시·군·구 통합 및
국가 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고,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제29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각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여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우리 시는

읍면동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20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주민교육,

지역사회진흥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과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화합 및 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기능과 역할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총회의 개최,

행정사무의 수탁 및 위탁,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의 중간단계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우선 활성화하고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주민자치의 성숙 과정을 거쳐

향후 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 상황과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하여 의회와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2. 타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선정활동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실행할 계획이 있다면 알려달라.

○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 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방재정의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두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시민이 온·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집행부 예산편성 확정 전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심의 후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발굴한 사업을
주민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저변 확대와
주민자치 활성화와 제도 성숙을 위해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의 성숙과 함께
정부의 법률개정 상황, 도시 특성 등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자치회가 시범 도입된다면
주민총회를 통한 참여예산 제안제도를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질문	3. 홍준표 대구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자신의 <맑은 물 하이웨이> 공약을 밝힌바 있다. 5공단 입주업종확대와 KTX구미역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 협력 등 구미 현안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당선 후 구미시장의 활동이 있었는지, 구미 현안에 대해 대구시장과 어떻게 협의할 계획인지 알려달라.

○ 4월 4일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체결한 현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2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첫 번째로는 물은 공공재이며, 국가 자원으로서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두 번째로는 그러함에도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장으로서 구미로 지나가는 물을 나누어 먹음에 따라서 구미 발전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 이러한 점에서

지난 4월 4일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은

구미 전체 발전에 대한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과

시의회나 시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라는

당초 협의 정신을 따르지 않은 점 등

시민들의 비판과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민선 8기 출범 후 대구시에서는

협정체결 각 기관에 일방적으로 협정 해지를 통보하였고,

현재 대구시는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 최근 반도체 기판 관련 글로벌 기업인 LG이노텍과 1조4천억의 MOU를 체결한 소식을 접했다. 구미 반도체 클러스터 특구지정을 위한 활동을 응원한다. 다만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양성에 대해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육성을 교육의 협소화라고 우려하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7월 직업계고에서 반도체전산업의 중간전문인력 5,000명 양성계획을 발표했다. 경북도 교육감과 관련 계획을 협의할 계획이 있는가?

○ 미중 등 주요국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면서
기업간의 경쟁을 넘어,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기업과 정부의
연합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도 기업투자 총력지원, 우수한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소부장생태계 구축 등
반도체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 8.4 시행 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에서는 동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 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구미시는 민선8기 출범 후
미래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지정과
반도체 산업 인프라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난 7. 21. 대통령집무실 방문 및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재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 구미시의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지정
여건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 최근 인천, 부산, 대전 등 광역단체 중심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경상북도와 반도체 산업 내 여러 주체의
연대와 협력으로 가능합니다.

○ 구미시는 경상북도와 계획수립 단계부터
협업을 통해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지지로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반도체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산·학·연 협력기반의 「산업정책협의체」 운영,
외부전문가로 구성 된 「반도체특화단지 실무협의회」 운영 등
반도체 산업 내 다양한 주체의
연대·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반도체 인력양성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조성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 구미시에서는 지역대학교에서
반도체 기업으로 이어지는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금오공대에서는 지난 7월 SK실트론과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 전공을
신설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 수요에
맞게 관련 학과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 포스텍, 경북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도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반도체 인재 양성에
중점을 맞춰
교육과정을 재구조화 하고 있습니다.

○ 또한, 9. 8. 대구가톨릭대학교와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여,

○ 취업 후 추가 교육 없이
실무투입 가능한
학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반도체 특화과정을 신설하고
구미시에서는 산학연계를 통해
채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과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과, 교육과정 등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 2023년부터
재구조화 사업을 고도화하여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중점 지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도체 인재 양성에는
기업, 교육기관, 관련 부처, 지자체가
함께 역량을 집중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미시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반도체 산업의
중간인력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 우수 인재들이 반도체 현장에
바로 투입 될 수 있도록
공동장비 구축 등 실습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수요와 연계한 현장교육 및
취업컨설팅을 통해
지역산업 내 반도체 인력이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경상북도 교육청, 도의원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